

동해안 산불, 재난극복 교과서로 만들자

江原日報

권원근 기자



고성·속초 일대에 산불이 이어지던 지난 4월 5일 속초시에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다. <속초=권태명기자 2019.4.5.>

‘사망 2명, 부상 1명, 이재민 572세대 1,295명, 재산피해 1,290억 원, 총 복구비 2,080억 원’ (5월 13일 기준)

지난 4월 4일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 강원지역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된 통계다.

산불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단 순히 큰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필자에게는 숫자 하나하나가 남다른 의미로 느껴진다. 숫자 하나에 울고, 숫자 하나에 좌절하고, 숫자 하나에

분노하는 이재민과 산불 피해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산불 당시 고성지역의 최대 순간풍속은 131km/h. 사람이 서 있기조차 버거울 정도의 세찬 바람이다. 강풍에 올라탄 산불은 견잡을 수 없었다. 불기둥이 날아다니고 도로와 마을로 들이닥친 시뻘건 불길은 마치 뱀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자신을 막아서는 것은 모두 태워버렸다. 원암리, 성천리, 인흥1·2·3리, 용촌1·2리, 봉포리 등 토성면 일대 8개 마을 산림 936ha, 주택 476동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집을 잃은 이재민만 1,162명이다. 하룻밤의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난 4월 5일 새벽까지 강풍을 타고 여러 갈래로 번져 마을과 건물이 불타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시내의 건물 주변이 온통 불에 휩싸여 있다. 고성=박승선 기자

악몽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컸다. 재앙이었다.

이재민들은 임시대피소가 차려진 학교 체육관, 마을 경로당, 공공기관 연수원, 지역 내 콘도 등으로 긴급 피난해 발만 동동 굴렀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평생 농사짓고 장사하며 살아온 터라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경황없는 상황 속에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장관들이 잇따라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운운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처럼 위로해 정부를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리고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긴 기다림에 들어갔다.

산불 발생 한 달 만에 당·정·청협의회는 ‘강원산불 피해복구 종합 복구계획’을 내놓았다. 복구비를 1,853억 원으로 확정하고 추경예산 940억 원과 국민성금 470억 원으로 범정부 차원의 산불 복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복구비 가운데 인명 피해와 주택 전·반파, 농·임업·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 복구에 12.5%인 245억 원을 투입하고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에 87.5%인 1,608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복구비 대부분이 이재민들의 기대와 달

리 공공시설 복구에 집중됐다. 삶의 터전을 잃고 연수원, 콘도, 마을 경로당 등 낯선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오던 이재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산불 복구계획에 분노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 머리띠를 두르고 산불발화의 책임이 있는 한전과 정부를 성토했으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며 무관심했던 이재민들도 속속 투쟁 대열에 합류하며 세를 키우고 있다. 요원지화(燎原之火)란 말이 딱 어울릴 듯싶다.

이재민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삶의 터전 복구를 위한 지원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

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 복구 분야를 살펴보면, 주택 전파의 경우 정부의 주거지원비 1,300만 원에 지역지원금 2,000만 원, 국민성금 3,000만 원 등 모두 6,300만 원이 지원됐다. 반파는 전파의 절반인 3,150만 원이다. 전파를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산정한 건축비는 평당 500만 원. 이를 근거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소 18평에서 최대 30평까지만 지방비가 70% 보조된다. 나머지 30%는 빚을 내거나 자부담해야 한다.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평수인 30평 신축을 가정하면, 건축비는 1억 5,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70%인 1억 500만 원까지만 지방비가 지원된다. 이미

받은 주택 전과 지원금 6,300만 원에 더해 4,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4,500만 원은 건축주인 이재민의 몫이다. 문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그 지원기준이 고무줄처럼 변한다는 것이다. 국민성금과 구호품의 담지 정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에도 고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356ha를 잿더미로 만들고 주택 5채도 불에 타 이재민 7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원된 것은 주거비 1,300만 원이 고작이었다. 여기에 얼마 되지 않은 국민성금이 보태진 게 전부다. 이들 이재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아직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의 피해복구는 더 답답하다. 자금유자,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간접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복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피해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하지만 사업장도, 장비와 공구도 모두 불에 타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거안정과 생업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각에서는 최선이라고 말하겠지만 피해 주민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의 재산피해 회복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피해 주민들 스스로 빚을 내서 집을 다시 짓고 가게를 마련해 생업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것이다.

주택 전파의 경우 신축에 따른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사업장 건축·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고성·속초 산불의 한국전력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피해 주민에게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산불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속히 처리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정부는 이번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2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

다. 하나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것이다.

산불 발생 2시간여 만에 화재대응 3단계로 격상한 뒤 대형산불 대응체제로 전환,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소방차 872대와 헬기 110여 대 등이 동원돼 신속한 진화가 이뤄졌고 수습·복구체제로 전환도 빨라 피해 최소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주택, 소상공인, 대형 농기계 등 피해복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불피해 복구계획 발표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뒷짐 지면 안 된다.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구멍 숭숭 뚫린 제도 미비를 확인한 만큼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기 식’ 땀질 처방이 아닌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등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의 재산피해 산정기준과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실태파악과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산불 등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재난구제기금 설치, 산불이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해안의 특성을 반영한 산불 공보험 도입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와 함께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초속 25m 강풍과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한 대형 소방헬기 등 진화장비 확충, 산불 특수진화대 처우 개선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지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다. 산불 대응과 수습, 복구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엇이 잘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모두 드러났다. 남은 것은 극명하다. 제도가 부실하면 보강하고, 법이 없으면 만들어 재난극복의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

산불피해 주민들은 큰 보상과 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원치 않은 재난으로 송두리째 잃어버린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원상태 수준으로 돌려 달라는 것이다.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법과 제도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아야 한다. 🙏